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대응 본격화

전북자치도, 내년 12월까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일정에 맞춰... 초광역권 기반 발전 방향·지역 계획 마련 '박차'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12월까지 국토교통부의 국토종합계획 수립 일정에 맞춰 초광역권(특별자치권)을 기반으로 한 발전 방향과 도 차원의 지역 계획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대한 수정계획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등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담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관련 사전용역에 착수하고, 10월 계획수립 지침이 배포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수정계획은 총괄 편, 시·도 지역 편 등 기존 계획의 틀을 넘어 지역 주도의 초광역 및 특별자치권의 공간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권역 편이 새롭게 추가된다. 또한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방향과 함께, 지역산업 육성을 선도하는 융복합 거점 및 신규 교통망 계획 등을 연계한 구체적인 공간전략이 수립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수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초광역권에 대한 대등한 특별 자치권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 지방시대위원회, 정치권 등에 지속적인 협

의와 건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도 대상 설명회에 이를 포함시키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에도 내실 있는 지역계획과 특별자치권(초광역권)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수정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중장기 국가계획인 만큼, 전북자치도는 전북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중장기 로드맵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권 메가시티 육성을 위한 공간계획 마련, 광역 교통망 및 주요 철도·도로망 계획 반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중요한 기회"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역계획과 특별자치권 발전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한국지방세연구원, 빈집 문제 해결 위해 학술세미나 개최

빈집 재산세 감면·세액공제 등 지방세제 개선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27일 전주시 왕의지빌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유류 재산인 빈집의 전략적 활용과 지방세 지원 방향'을 주제로, 빈집 활용 방안과 지방세제 개선 방안을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노후된 빈집은 안전사고 위험과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초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지만, 빈집 소유주의 자진 철거 거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 방안으로 △절거를 유도하기 위한 재산세 감면 △소방분지역지원시설세 부과 등의 안건이 논

의됐다.

발제는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이 맡았으며,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자로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승 전북특별자치도 세정과장,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준영 전주대학교 교수, 최정현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술세미나 결과를 지방세제 입법 건의안에 반영하고, 빈집 정비계획과 함께 실질적인 실행 방안



전북특별자치도가 27일 전주시 왕의지빌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빈집 문제는 단순히 미관이나 안전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며, "이번 학

술세미나를 계기로 빈집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소유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지방세제 개선안을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시·군과 지방세 체납자가택 수색... 압류품 134점 매각해 낙찰금 4800만원 확보

내년부터 전북 자체 공매 추진 예정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및 상습 지방세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압류한 물품 134점을 2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공매하여 총 4,800만원의 낙찰금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7월 전북자치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방세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 귀금속과 명품 시계 등 총 178점을 압류했다. 이 중 134점이 진품으로 판정

되어 공매에 부처졌다.

공매된 물품은 △귀금속 △명품시계 △명품 가방 및 지갑 △양주 △그림 △기념주화 △메달 등이 포함됐다.

한편, 공매 물품 소유자의 배우자가 우선 매수 자격을 부여받아 낙찰가의 50%만 납부하고 우선 매수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공매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감정평가 후 매각 예정가격을 결정, 공매

공고를 거쳐 진행된다. 공매 공고 후 체납자 및 납세담보물 소유자들에게 통지가 이루어지며, 입찰은 최고가격 입찰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한국경공시'를 통해 물품 상태와 예상 낙찰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도를 높였다.

공매 당일에는 오전 9시부터 물품 전시가 이루어져 참관이 가능하며, 입찰은 스마트폰을 통해 진행되고 오전 12시에 마감된다.

낙찰 이후 배우자 우선매수 건 등이 처리된 뒤, 최종 결과는 오후 2시부터 입찰 참여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은닉재산 추적 및 압류와 가택수색 등을 병행할 예정이며, 가택수색 압류 물품 공매를 전북자치도에서 자체 추진하여 성실 납세의무 정착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지능형 119콜백시스템 통한 재난신고 폭주 해결 사례 '호평'

전북자치도,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6일 정부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최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136건의 우수사례 중 1·2차 예선을 거쳐 최종 본선에 오른 6개 기관이 경합을 벌였다.

전북자치도는 본선에서 '지능형 119콜백시스템'을 통한 대형 재난 신고 폭주 문제 해결 사례를 발표하며 전문가 심사와 실시간 온라인 투표에서 압도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기술 자문을 통해 인공 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기술의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 콜센터의 사례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 연구했다.

노력의 결과 AI 음성 분석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고, 신고 폭주 상황에서도 효



율적이고 신속하게 긴급 구조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 지난 7월 10일 도내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발생하여 평소보다 10배 이상 폭증한 신고량이 접수되었지만, 지능형 119콜백시스템이 가동되면서 72분간 632건의 무인 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AI 음성 분석으로 긴급 신고로 판단되는 35건을 신속히 대응해 하천 범람으로 고립된 마을 주민 18명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은 현재 타 시도 소방본부에서도 벤치마킹하며 확산되고 있으며, 소방청에서 구축하고 있는 차세대 119 시스템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도내 농수산물식품 30개사, 글로벌 판로 개척

일대일 수출상담회·맞춤형 컨설팅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전주 그랜드 힐스톤 호텔에서 국내 전문무역상사 14개사와 도내 농식품 기업 30개사가 참여한 일대일 수출상담회 및 맞춤형 컨설팅을 개최했다.

전문무역상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지정한 수출 전문기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운영된다. 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이들과 협력하여 글로벌 시장으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도는 사전에 농식품 기업의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젓갈, 김부각, 스낵류,

건강기능식품 등 전문무역상사들의 관심 품목을 따라 기업과의 매칭을 추진했다. 상담회에서는 각 기업이 보유한 제품의 해외시장 경쟁력과 개선점 등에 대한 맞춤형 조언이 이어져 참가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번 상담회는 단순한 상담을 넘어 전문무역상사들이 기업별로 필요한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컨설팅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수출 초보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에이즈 예방 캠페인 실시

전북특별자치도는 제37회 세계 에이즈의 날(12월 1일)을 맞아 오는 12월 3일 전주 객사 일대에서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전북지회, 전주시보건소와 함께 도민 대상 에이즈 예방 및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에이즈 조기발견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캠페인의 슬로건을 '팩트 체크로 편견 제로(Zero), 검사로 불안 제로(Zero), 예방으로 위험 제로(Zero)'로 하고, 에이즈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예방과 조기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 공고 제2024-2431호

제4차 군산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안) 열람 공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제4차 군산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인접 및 관련 시·군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공고명: 「제4차 군산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안)」 열람 공고
- 공고기간: 2024. 11. 28(목) ~ 12. 11.(수), 14일간
- 공고방법: 군산시청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 계획의 범위
 - 계획기간: 2022년 ~ 2026년(5년)
 - 공간적 범위: 군산시 행정구역 및 주변 교통영향권역
 - 수립목적: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 수립
- 계획의 주요내용
 - 과업의 개요
 -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
 - 장래 교통여건 전망 및 교통수요 예측
 -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 대중교통 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수립
 -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 열람안내
 - 열람기간: 2024. 11. 28(목) ~ 2024. 12. 11. (14일간)
 - 열람장소: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063-454-3782)
 - 의견 제출기한 및 방법: 열람기간 내 서면제출

* 의견 제출서 서식은 군산시 홈페이지 공고 및 열람장소 비치

2024년 11월 27일 군산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